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집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실시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을/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은/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은/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 | ㉡ | ㉢ | ㉣ |
|--------|---------|------|---------|
| ① 국무총리 | 국무총리 |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 ③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 ④ 대통령 | 국무총리 | 대통령 | 국무총리 |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 ③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④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문 4. 다음 사례에서 ㉠ ~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11. 1. A 특별시에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는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였다. A 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A 특별시장 甲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고, 2020. 11. 3. 甲은 A 특별시에 을중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해당 사태가 B 광역시까지 확대되자, ㉠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1. 6. A 특별시와 B 광역시에 을중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

소관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甲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 판단하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乙과 중점관리대상물자(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소유자인 丙에게 2020. 11. 10. 각각 협력을 요청하였다. ㉡ 乙에게는 구두로 참여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 丙에게는 문서로 사용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들에게는 지정 당시 이미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둔 상태이다.

2020. 11. 20. 평상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국회는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은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다. ㉣ 甲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丙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을 2020. 11. 29.까지 연장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 ~ ㉤에 해당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 교육을 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 명령은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은/는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① ㉠은/는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은/는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은/는 정부연습의 실시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
- ④ ㉣은/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훈련은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우선한다.
-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인력자원에 대한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훈련에 우선한다.
-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와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ㄴ.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 ㄹ.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되며,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인력인 甲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본다.
- ②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甲이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때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③ 甲이 완치 후 퇴원 수속 중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보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
- ④ 甲은 훈련기간이 1일을 초과하고 동시관리훈련이 아닌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기본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ㄹ.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동행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9세 여성 甲은 2013. 3. 2. A 산업대학에 입학하였고, 2020. 12. 19. 현재 B 리(里)에 주소를 두고 있다. 甲은 지역사회에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기 위해 2020. 12. 19.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 <보 기> —

- ㄱ.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A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없다.
- ㄴ. B 리의 이장 乙은 甲이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더는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ㄷ.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주소지인 B 리에서 그 구역 외에 있는 C 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B 리의 이장 乙의 승인을 받아야 甲은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둔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대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은 직접 교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ㄷ.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轉地)교육은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ㄹ. 교육훈련 대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는 없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민방위 대원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과 무관하게 법정 사망 보상금 전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②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재해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읍·면·동장은 등화의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시설의 소개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등화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8. 甲은 A 시 B동에 소재하면서 乙을 직장의 장으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동장이 전달하며, 직접 교부하는 경우 甲이 없으면 같은 세대 안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ㄴ. 甲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A시장은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ㄷ.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乙을 거쳐 A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사용자 乙이 甲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X	O	O
④	X	X	X	X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최종 선발예정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미성년자가 예비군편입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역예비군 편입지원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직장예비군 편입지원서는 해당 직장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중에 해당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즉시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 ②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한 경우 직장의 장은 그 퇴직 사실을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ㄴ.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직장예비군대원은 보류원서를 소속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ㄷ.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한 경우, 그 동원을 연기하려면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동원의 보류원서 및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 중 성년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22. A 해안지역이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어 2020. 12. 19. 예비군의 동원을 명령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지역 리·동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011. 8. 31.에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甲은 예비군에 편입될 수 있다.
- ② 2012. 8. 31.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乙에 대해서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을 명령한 경우, 동원된 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대원 丙과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예비군대원 丁에게 적용될 법정형은 다르다.
- ④ A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 戊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위탁받았더라도, 그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戊는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문 23. 무장폭도가 A 지역에 침투하여,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A 지역의 교통 및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이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ㄴ. 甲은 출입 제한 명령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ㄷ. A 지역에 출입하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甲은 그 사유를 버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ㄹ. A 지역을 출입하는 버스가 운행을 못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버스회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문 2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무장을 위한 무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자신이 별도로 정한 장소에 무기를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③ 예비군특수복 중 근무복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기(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동기(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④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른다.

문 25. 2017. 11. 30. 예비군대원으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甲은 총 3년간 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2020. 12. 2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ㄱ.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ㄴ. 휴업 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지급액을 결정하여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ㄷ. 甲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 ㄹ. 甲에게 지급되는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1억 950만 원으로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26.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소속 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치료비를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ㄴ.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ㄷ.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ㄹ. 甲에게 부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은 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의 순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우선한다.
- ④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제정할 때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③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긴급구조업무와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비등의 선지급과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등을 선지급 하려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한 피해 주민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지급한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지 아니한다.
- ④ 반환하여야 할 복구비등의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
- ㄴ. 안전관리현장의 제정·고시
- ㄷ. 안전정보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 ㄹ.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그 결과 공표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 ㄹ.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 12. 31.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2020. 9. 25.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기한을 준수한 연장신청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법령 I - 헌법

문 1.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
- ㄴ.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공무원은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와 기본권을 누리는 기본권주체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면직기준이나 면직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 ㄹ.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준비행위의 단계에 이른다고거나 선거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당에의 가입 자체를 일상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내 보육일상이 담긴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피촬영자인 보육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④ 경찰이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의 방식으로 촬영함으로써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시위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집회·시위참가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3.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대기업 제조업자의 독과점을 막고 지역소주제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독과점규제와 지역경제육성이라는 헌법상의 경제 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주류판매업자와 다른 상품 판매업자간에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달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4.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제1항이 명시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문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 ② 감청설비 제조·수입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통신은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문 6.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③ 국정조사제도는 1980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으며, 국정감사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④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 7.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② 유흥주점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는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은 그 제정형식이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라는 행정규칙이지만,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제한대상 및 제한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그 부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문 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헌법개정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②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한 것은 1960년 개정헌법(3차 개헌)이 처음이다.
- ③ 대법관 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없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 ④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헌법개정 시 국민투표권이 없다.

문 9.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대한 심사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 10.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되므로,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 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③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정당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들과 이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문 1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의무해소 전에는 그의 국적 이탈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
- ③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문 1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정부의 제2인자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 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중지시킬 수는 있다.
- ㄷ.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ㄹ.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13.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ㄹ. 정부는 전쟁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②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해서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15.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에서 규정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② 1954년 개정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付)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③ 197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40세' 이상으로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④ 1980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